

分 析 과 展 望

UR(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원불교 입장

〈 第 6 號 〉

원기 79 년 7월 일

UR에 대한 원불교 입장

목 차

UR에 대한 원불교 입장은?	5면
1. UR협정은?	7면
2. UR협정 과정은?	7면
3. UR협정 과정과 정치는?	7면
4. UR협정 내용은?	10면
5. UR협정 후 손익계산서는?	11면
6. UR협정 후 농산물 분야의 영향은?	14면
7. UR협정 후 공산품 분야의 영향은?	18면
8. UR협정 후 서비스 분야의 영향은?	21면
9. UR협정 후 농산물 분야에 대한 대응책은?	24면
10. UR협정 후 공산품 분야에 대한 대응책은? ...	28면
11. UR에 대한 향후 일정은?	28면
12. UR의 정치적 의미는?	29면
13. UR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33면

<參考文獻>

UR에 대한 원불교 입장은? (I)

1. UR의 정신은 세계일가 인류한가족의 애정으로 임해야 한다.
2. 강자는 약자를 진화시키고 약자는 강자에게서 배워 자력을 기르고 기른후에는 다시 강자로 진화시켜 가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3. 先頭走者는 後發走者를 이끌어 주고 후발주자는 선두주자에게서 성실히 배워 스스로 진화 하도록 해야 한다.
4. UR은 自利利他가 원칙이다. 이윤의 독점은 UR정신의 배반이다.
5.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모두 차지하려는 승패개념의 경제구조를 상호보완과 균형발전을 향한 경제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6. 특히 기아에 허덕이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민족들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
7. 시운이 세계주의로 열리고 있는데도 내것만 고집하는 것은 단혀 있음이요 남의 것에만 매달리는 것은 넋을 파는 것이다.
8. 안으로 자립하고 밖으로 열어나가는 자세라야 한다.

UR에 대한 원불교 입장은? (II)

가. UR로 인하여 겪게된 어려움을 정부와 국민이 합심협력하
므로써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전화위
복의 계기로 삼자.

- 1) 국민 개개인이 새로운 시대의 국제적 상황과 미래의 변화에 대한 객관
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자.
- 2) 농업을 비롯한 각분야의 생산력을 높이고 특히 농촌을 살리는데 전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
- 3) 세계적 수준의 국력을 갖추고, 나아가 세계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등 각 분야가 새로운 각오와 대비와 노
력을하자.

나. UR은 일찌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예견하신 후천개벽 시
대의 도래가 바야흐로 이 세계에 전개 되는 증거의 일단이
다. 이에 전인류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새시대 새문명에 맞
추어 밝혀주신 정신개벽의 도덕문명으로 무장하여 다 함께
밝은 미래를 개척해 가자.

- 1) 전 인류가 한 권속이요 전 세계가 한 일터임을 깨쳐 각자 개인·가정
· 국가의 울을 트고 대세계주의로써 이세계를 한 집안 한 권속으로
만들어 가자.
- 2)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부처님이요,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지중한
은혜의 관계임을 깨쳐 언제나 自利利他로써 서로서로 감사하고 불공
하며 살자.
- 3)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안으로는 정신·육신·물질의 3방면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밖으로는 개방과 통합활용의 자세를 갖추자.
- 4) 실력을 본위한 지자선도의 새질서를 확립하여 불합리한 차별과 권위
를 지양하고, 강자는 경쟁관계에서 상호보완과 균형발전의 동반자 관
계가 되자.
- 5) 공익을 우선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도정신을 숭상하는 사회풍토

를 조성하여 특히 기아·질병·재난·전쟁등으로 생존의 위협속에 처한 민족에 대하여 전세계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자.

1. UR협정은?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986년 출범한 우르과이 라운드가 장장 7년간에 걸친 협상 끝에 마침내 1992년 12월 15일 최종 타결 되어 오는 1995년 부터 발효에 들게 된다.

2. UR협정 과정은?

(출처 : UR타결의 파장과 우리의 대응, 시사, 1994.1)

과거 일곱차례의 라운드와는 달리 유독 이번 UR이 최종 타결 되기까지 극심한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협상대상과 내용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수 밖에 없는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개방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특히 농산물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의 양대 주역인 美國과 유럽공동체(EC)간의 힘겨루기식 극한대결에다 韓國과 日本등의 쌀개방절대불가입장 등이 맞물리면서 UR협상은 한때 합의된 부분만을 중심으로 대충 마무리짓는 『축소타결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아예 물건너 갔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UR협상을 발의하고 이를 주도해온 美國의 막판 밀어붙이기에 EC, 일본 등 주요국들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돌아섬으로써 무려 7년간의 진통 끝에 UR은 햇빛을 보게된 것이다.

3. UR협정 과정과 정치는?

(출처 : 쌀개방으로 침통한 정부, 주간매경, 1993.12.15)

마침내 『쌀 개방』 태풍에 문민정부가 무릎을 꿇었다. 나라안에서는 막강한 金泳三 정권도 미국을 발원지로 하는 UR 原爆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누가 白旗를 들자고 했는가. 누구인가, 맨 처음 굴욕의 깃발을 준비한 사람은 사후약방문으로 朝野가 오뉴월 두터비 두엄위를 널뛰듯 설치지만, 무슨 소

용이람.

가. APEC 성과 순식간에 사라져

「쌀 개방」이란 말을 입에 담았을 때부터 降書를 내밀기까지 걸린 시간을 불과 닷새쯤. 말기 암환자가 쓰러지는 시간보다도 덜 걸렸다.

그 「방울」은 누가 달았는가. 美클린턴 행정부가 APEC 정상회담의 여세를 몰아 UR타결을 밀어붙여 올 때 정부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낼 것인가」가장 큰 걱정이었다. 金泳三 대통령은 「언론이 다 알면서 뭘 묻느냐」며 짜증을 냈다. 청와대는 지난주 앓던 이를 뽑아냈다. 꼭 누가 책임을 졌다기보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쌀 개방」은 기정 사실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YS의 바람대로 선수치기 좋아하는 언론이 총대 메기에 인색치 않았다.

어쨌든 쌀 개방 문제를 핵심층이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訪美를 마치고 전용기에 탑승, 귀국길에 오른 도중이었다.

당시 우리측은 韓·美 정상회담 결과를 순전히 北核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 했다.

반면 미국측은 「농산물 관세화를 포함,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국내 언론이 우리측 대표의 브리핑보다는 「농산물 관세화 = 쌀 개방 압력」으로 대서 특필함으로써 「하늘을 나는 청와대」는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 공보라인은 「쌀 개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했지만, 이미 물은 엮일려진 후였다. 성공적이라고 자랑하려던 YS의 첫 외교 무대 데뷔는 이그러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YS는 급거 경제보좌진의 보고를 듣고 함부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무조건 부인할 수도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으로 짐작된다.

YS는 귀국한 지 4일만에 있었던 국회 연설에서 「쌀 개방」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즉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을 씀으로써 국회와 내각에 고도의 「교통정리」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던 것.

YS의 NCND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면서부터 정부내에 쌀시장 개방 「불가」는 「피」자가 하나 더 붙어 「불가피」쪽으로 급선회했다.

물밑에서는 韓·美간 실무라인 접촉이 부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식 개방 방안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이 여러 창구를 타고 국내를 두들겨댔다.

시간을 맞춰 여러 지도자들이 청와대로 신속히 불러 들어갔다. 黃寅性 총리 · 金鍾泌 민자당 대표 · 李經植 부총리 등이 시도 때도 없이 YS와 독대하면서 쌀에 대해 함께 고뇌(?)했다.

경제를 책임지는 李부총리가 1일 오전 10시에 청와대로 불러들어 간 후 곧바로 과천청사로 달려가 대외협력위(국제경제 정책 결정에 관한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실상 쌀에 관한 YS의 의중은 이때 확고하게 내각에 전달됐을 것이다. 대외협력위는 정부 지침을 결정, 다음날 許信行 농림수산부 장관을 GATT 본부가 있는 제네바로 급파했다.

나. JP, 불가피쪽으로 맨먼저 선회

한편으로 국제 협상에서 버티는 데까지 버텨 보기로 하고, 다른 한편인 국내에서 당면한 문제가 바로 쌀 개방 총대를 누군가에게 메도록 하는 데 골몰했다.

여기에 눈치 빠른 JP가 먼저 나섰다. 그는 서울을 피해 광주로 가서 물꼬를 텄다. 무엇이 진정한 국익을 위한 길이나를 따져봐야 한다면 쌀 개방을 시사한 것. 청와대의 입이 벌어졌다.

「총대 메기 시나리오가 본격 가동된 것이냐」는 물음에,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더 두고 보자」며 의미심장하게 얼버무렸다.

곧이어 KIET(산업연구원)는 「만약 UR 협상이 타결되면 수출이 40%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발표했고,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시 그런 식의 결론을 강조했다. 과거의 개념으로 보면 이른바 「官制 나팔」이 울린 격이다. 물론 맞는 논리다. 전세계 유수한 연구기관들도 그런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李부총리가 좀 뜸을 들인 다음 4일 쌀 개방의 불가피성에 관한 운을 뗐다. 유추컨대 이때는 제네바 현지에서 許장관으로부터 「최소 시장 접근 기간 최

대한 확보 외에 다른 수단 없음』이란 打電을 접한 직후로 관측된다. 黃총리 역시 그런 말을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쌀 개방 悲報는 벽력처럼 날아들었다.

YS는 다른 한편으로 언론계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언론사 사장들, 그리고 편집국장들이 2, 3일 연속 청와대만찬에 초대됐다. 편집국장들과의 저녁 자리는 아주 침통했다고 한다.

YS의 발언 요지는 이랬다. 『...우리와 입장을 같이할 나라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 고립무원이다. 해답은 여러분이 더 잘알지 않느냐. 무엇이 국익인지. 멀리 앞을 내다보아야 할 것 아닌가...』

『大選 전에는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고 했잖은가...』라는 질문에 『그뎨 UR 타결 가능성이 반반밖에 안됐다. 지금은 거의 100% 타결이다』라는 대답이었다.*

4. UR협정 내용은?

(출처 : UR,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가, 재정, 1994.1)

UR협상의 내용은 다음의 다섯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무역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관세를 낮추고 수입제한 등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 및 지급규모삭감과 비관세 장벽의 관세화, 관세의 전반적 삭감을 통한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제거하자는 것으로 덤핑행위(국내 시장가격보다 싸게 수출하는 행위),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을 방지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기업간에 정정당당히 경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넷째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의무 부과, 시설채 및 원자재의 국산이용 의무 등 여러가지 제한을 없애고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무역과 관련된 이들 분야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자는 것이다.

다섯째는 서비스교역을 자유화하여 금융, 보험, 해운, 유통 등 서비스교역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5. UR협정 후 손익계산서는?

(출처 : UR협정 후 손익계산서, 주간조선, 1993.12.23)

한국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두말할 것도 없이 쌀시장 개방 때문이다. UR에 대한 국내 언론들의 보도 역시 쌀문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기에 더해 농산물, 건설,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논조가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입장에서는 전세계 1개 16개 국가가 지난 7년간 때로는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때로는 무의미한 트집잡기로 시간을 보내면서도 UR 협상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 세계 각국은 UR에 그토록 집착해야만 했나.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UR이 제시하는 장미빛 미래전망에 대한 기대와 함께 UR이 실패 했을 경우 예상되는 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경제의 장래를 위해 UR은 반드시 타결돼야 하며, 전진이 아니면 후퇴가 있을 뿐 현상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세계 각국이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UR협상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때에도 UR 자체의 의의를 부정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UR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은 지난 12월 3일, UR협정이 타결될 경우 오는 2005년까지 연간 세계교역량은 7천 4백 50억달러, 각국의 소득은 2천 3백억달러 증대할 것으로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GATT사무국 경제전문가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UR협정에 따른 소득증대가 주로 선진국에서 적지않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선진국들의 농업보조금이 삭감되고 섬유류에 개발도상국들은 농산물과 기타 1차산업 상품, 섬유·의류제품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0년후에는 이들 분야의 경제활동 증가로 개도국에서 8백억달러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앞서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UR타결로 오는 2002년까지 세계적으로 연간 2천1백30억~2천7백40억달러의 소득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오는 2002년에 8백7억달러의 소득을 추가로 늘려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이 3백70억달러, 일본 2백60여억달러, 미국 1백70억달러,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1백30억달러, 중남미 90억달러, 아시아(중국 일본 제외) 지역이 60여억달러의 순이었다.

세계 전체적으로 연간 2천3백억달러 정도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일 수도 있다. 현재 전세계 국민총생산(GMP) 합계가 20조달러를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소득이 1% 증가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과연 7년씩이나 갖은 고생을 겪은 보람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성과라도 누적효과를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극심한 경기 침체로 고전하면서 체로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교역과 소득증대 효과 그리 크지는 않더라도 선진국들이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경기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UR이 실패할 경우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GATT등이 제시한 수치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가트의 통상규정 강화와 非관세장벽 제거, 투자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따른 이익은 전혀 고려에 넣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UR의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되나. 물론 UR의 성공은 개도국들에게도 이익이다.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선진국 경제회복은 개도국 수출상품의 시장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우기 일본이나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도국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피,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는 자유무역의 원리를 보강하고 확산시키려는 시도인 것이다.

가. EC와 중국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 ACP국가들은 단기적으

로 불이익

결국 UR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보면 UR이 과연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각국은 마치 UR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안이지만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장에 나선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는 UR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유익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농민들의 입장에선 농업구조 조정이 가속화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익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다. 또 미국의 섬유·의류산업과 철강산업, EC의 농업과 항공산업등 그동안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던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UR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산업별로 이해득실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따라서도 UR의 손익계산서는 달라진다. 세계은행의 전망에서는 EC와 중국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보는 반면,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은 혜택이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중동 산유국들의 경우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로 유가가 인상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UR에 특별히 기대할 것도 불안한 것도 없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UR이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프리·카리브해연안·태평양권(ACP) 69개국 각료회의 의장인 웨시 보치웨이 가나 재무장관은 최근 「UR협상이 성공적으로 종결될 경우 ACP국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치웨이 장관은 미국과 EC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서 농업보조금이 삭감돼 가격인상을 유발할 것이라고 「이에 따라 ACP국가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식량수입비용이 연간 27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세계적으로 포괄적인 관세인하와 시장개방 조치가 이루어지면 EC가 로마협정에 따라 ACP국가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무역특혜도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 했다.

그러나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ACP국가들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보치웨이 장관조차 불이익에 대해 「단기적」이라는 전제를 붙였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항상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까. 한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GATT탈퇴의 극단론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6. UR협정 후 농산물 분야의 영향은?

(출처 : 홍성천, UR 타결과 파장, 이코노미스트, 1994.1.5)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UR협상 타결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 일정이 잡혀졌다.

쌀은 수입 전면개방과 관련해 95년부터 10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됐으며 유예기간중에는 전체 소비량의 1~4%(최소시장접근비율)를 연도별로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유예기간 9년째에 가서 전면개방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갖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95년 첫해에는 전체 쌀 소비량(86~88년 연평균 소비량) 3,940만 섬의 1%인 39만4,000섬이 수입되며 이후 5년간은 매년 0.25%포인트씩 수입량을 늘려가 10년 뒤인 2004년에는 소비량의 4%인 157만6,000섬이 수입될 전망이다. 이 기간중 쌀수입 가격은 5%의 관세만 붙기 때문에 국내가격에 비해 4분의 1내지 6분의 1로 훨씬 싸게 수입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제수지 방어를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온 농축산물(소위 BOP품목)중 쇠고기는 전면개방시기를 2000년으로 미루는 대신 현재 관세 20%로 들어오는 수입쿼타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그 이상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95년 7월 이후 3년 동안 40%의 특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가. 가격 競爭力 없어 버티지 못해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 등 BOP 8개 품목은 95년부터 관세화를 하되 국내외 가격차이가 너무 심한 점을

감안, 최소세율을 일정선으로 제한하는 실링관세제를 적용키로 했다. 당초 이들 품목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BOP위원회 결정에 따라 UR협상과 관계없이 97년 7월부터 현행 관세로 개방토록 일찌감치 합의가 돼 있었던 품목이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품목인 보리,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은 95년부터 국내외 가격차 전액을 관세화해 수입을 개방하기로 했다.

UR 타결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이지만 농축산물만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분석에 따르면 UR가 당초에 둔켈 초안대로 타결돼 쌀을 비롯한 15개 품목이 개방될 경우 2000년까지 농가피해액은 12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입개방 불가를 외치며 마지막까지 버텼던 쌀이 수입개방으로 결정됨으로써 야기된 농민들의 허탈감은 예상 외로 심각하다. 당장 외국쌀이 수입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없어 도저히 버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는 수입쌀에 대해서는 가공용으로만 유통시키는 등 특별관리해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액은 7조 282억원(부가가치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의 3.1%, 전체 농업생산액의 48.5%를 차지하는 농가의 주수입원이다. 쌀 생산량은 88년 4,200만섬을 정점으로 89년 4,095만섬, 90년 3,898만섬, 91년 3,739만섬, 92년 3,702만섬으로 줄었고 올해는 3,250만섬으로 추정되고 있다. 쌀 자급률도 91년 102.3%를 고비로 지난해에는 97.5%로 떨어졌다. 농림수산부는 재배면적이 줄고 이농이 확대됨에 따라 98년 쌀 생산량은 92년 대비 9.5%포인트가 줄고 쌀 생산량의 GNP비중이 2%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쌀 자급률이 줄고, 당장 95년 부터 들어올 경우 가격의 단순비교만으로도 우리쌀이 버티기 어렵다. 우리쌀의 t당 생산비(87~89년 평균)는 달러로 환산해 941달러인 반면 미국은 278달러, 태국은 139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또 필리핀은 124달러, 인도네시아는 118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비가 이처럼 높은 까닭은 좁은 경지택과 제조업 등의 투자우선순위에 밀려 농업기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다. 이같은 상

황에서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 국내 농업의 파쇄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고 급기야는 농업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같은 현상은 최소시장 개방폭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뤄질 공산이 크다.

나. 실링 關稅 적용으로 불리

그간 쌀에 밀려 뒷전에 가려졌던 쇠고기 등 나머지 14개 기초 농산물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14개 품목의 연간 생산액은 6조 2,000여억원으로 국내 전체 농업 생산액의 37%에 달해 쌀과 거의 맞먹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마늘·고추·감자 등 이들 품목은 쌀농사로 별 재미를 못보는 농민들이 부차적으로 영농을 해 여유돈을 만질 수 있는 수입원이어서 농민들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도 크다. 특히 전면개방시기는 늦추었지만 수입 쿼타량을 대폭 늘린 쇠고기의 경우 소사육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60만 9,000여 농가에서 한우 210만마리, 젖소 50만마리 등 모두 260만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90~92년 평균생산액이 1조 433억원으로 전체농업생산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중 평균 쇠고기 소비량은 20만 9,000t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1만 1,000t을 수입, 자급률이 46.8%에 불과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쇠고기 시장이 개방될 경우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농가피해액이 2조 2,343억원으로 쌀 다음으로 피해액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89년 美國등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96년까지 쿼타제로 쇠고기를 수입하되 97년 7월부터 GATT의 국제수지조항에 따라 양허관세(20%)나 현행 관세(30%)로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90년 5만 8,000t, 91년 6만 2,000t의 쇠고기를 수입한 데 이어 93년 2차 쇠고기 협상결과로 93년 9만 9,000t, 94년 10만 2,000t, 95년 11만 3,000t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95년 이후부터도 수입량에 대해서는 국내의 가격차의 상당량만큼 관세를 매겨 수입하기로 했으나 이번 협상 결과 최고 관세율이 40%로 조정되어 당초의 고

울관세로 개방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됐다.

쇠고기와 함께 95년부터 개방될 8개 품목도 관세의 상한선을 일정 수준에 묶어 관세화에 의한 수입억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도입된 실링관세의 적용으로 당초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이들 기초농산물도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기는 마찬가지. 돼지고기만이 국내외의 가격차가 117%에 불과할 뿐 닭고기(212%), 고추(533%), 마늘(261%), 양파(209%) 등이 모두 두배 이상의 가격차가 있으며 참깨의 경우에는 무려 국내외 가격차가 10배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보리(348%), 감자(363%), 고구마(695%)등도 국내외 가격차 전액을 관세화해 수입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들의 타격이 크다고 보는 것은 과거 밀·옥수수 등 수입 개방된 품목의 경우 거의 국내 생산은 중단되고 수입품만이 유통되는 현상을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밀의 경우 수입밀에 밀려 국내생산은 자취를 감추었고 옥수수도 수입의존도가 98%에 이르고 있다. 특히 수입의존도가 50%를 넘어선 쇠고기·참깨·콩을 제외하고 수입의존도가 1% 안팎인 나머지 품목들은 급작스런 개방으로 심리적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 農家 지원정책도 변화 강요

UR타결로 비상사태에 걸린 농가는 어쨌든 완전개방에 대비한 구조개선작업을 치러야 할 입장에 놓였다. 그렇다고 당장 정부가 손을 써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정부가 쌀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다. 또 과거처럼 수입 피해액에 대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 일례로 쌀의 경우 수매제도를 계속 운용할 수는 있지만 수매가격과 시장가격차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수매가를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UR는 시장개방뿐 아니라 정부의 기존 농가지원정책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그야말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도 당장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덜고 수입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품질확보에 나서야 할 때이다.

7. UR협정 후 공산품 분야의 영향은?

(출처 : 홍성천, UR 타결과 파장, 이코노미스트, 1994.1.5)

쌀과 달리 공산품 부문은 UR타결로 호기를 맞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관세율이 UR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아 추가로 낮출 필요가 없는 반면 선진국들의 관세율은 크게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관세율은 8.9%로 UR에서 오는 98년까지 낮추기로 한 평균관세율 12.2%보다 훨씬 낮다. 반면 UR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려면 각국은 관세율을 지난 86년 9월대비 3분의 1수준(약 33%)까지 낮춰야 한다.

다만 관세를 전혀 매기지 않는 無관세화 품목과 관세를 6.5%수준으로 크게 낮추는 품목들이 문제다. 미국은 지난 7월 東京쿼드 회담에서 합의한 8개분야 무관세화 및 화학 1개 품목의 관세 대폭 인하案과 한국이 받아들여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화학 제품의 경우는 196개 품목 가운데 192개 품목의 관세가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맥주 등의 無관세화와 수산물 등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하는 국내사정상 불가하다고 버티고 있으나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 保護膜 없는 生存경쟁 돌입

의약품은 페니실린과 같이 국내 자급이 필요한 기초의약품을 제외하곤 95년부터 수입의약품가격이 계속 낮아진다.

UR와 별도로 진행돼 온 철강 협상은 오는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에 걸쳐 매년 10%씩 균등하게 관세를 내려 2005년부터 무관세화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반덤핑, 보조금 등 나머지 쟁점은 94년 초협상을 재개, 매듭 짓기로 했다.

철강제품의 관세율은 9%수준이어서 추가적인 인하조치가 필요 없다. 따라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철강의 경우 수출에 있어 크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판재류의 수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일부 특수철강 제품의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섬유류의 경우는 다자간섬유 협정(MFA)을 철폐, 수입쿼타를 10년간 16% (최초 3년), 17%(4년), 18%(3년)씩 줄여 11년째인 2005년에는 나머지 49%의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쿼타로 묶여 있는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쿼타가 철폐되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후발 개도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UR 타결로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관세와 「희색장벽」이라고 불리는 각종 비관세장벽이 무너져 기업들은 보호막 없는 생존경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국가간 교역량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UR를 주관해 온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은 오는 95년부터 UR가 발효되면 10년 뒤인 2005년에는 세계교역규모가 현 수준보다 12%가 늘어 7,450억달러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UR 타결로 연간 1,000억달러의 교역 증대 효과가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오는 2002년에는 세계 GDP(국내총생산)가 2,741억달러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진국들의 「희망」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UR 타결이 농수산물 부문에는 타격을 안겨주겠지만 국내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失보다 得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는 상당한 「호기」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늘겠지만 수출 증가가 수입증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이는 각국의 관세율 수준이 UR 이전에 비해 33% 정도 낮아질 것이고 우리나라 관세율이 UR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나. 1%의 追加成長 가능하다

산업연구원(KIET)의 崔洛均박사는 UR타결 후 3년까지 산업 전체적으로 49억 6,000만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6.68%)가 있는 반면 수입도 4억 5,000만달러 늘어 전체적으로 45억 1,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화학산업이 18억달러로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금속제품의 경우 17억8,000만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기계산업의 경우 10억달러, 일반기계및 전기기기 1억 2,000만달러, 섬유

· 가축 1억 8,000만달러 등이다.

수입은 기계 9억 9,000만달러, 일반기계 및 전기기기 6억 1,000만달러, 전자 3억 5,000만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화학·석유 산업의 경우는 가동을 제고와 생산성 향상으로 오히려 4억달러 정도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박경호박사는 「UR타결 후 3년간 0.35~0.40%의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UR타결 효과가 초기에 집중될 경우 0.8~1.0%의 추가 성장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박사는 또 수출은 향후 5년간 평균 1% 내외, 수입은 평균 0.3~0.6%가 늘어 무역수지는 연간 0.4~0.7%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경제연구원의 韓弘烈박사는 향후 10년간 수출은 224억 9,000만달러, 공산품 수입은 72억 1,000만달러에 이르러 152억 8,000만달러의 수지개선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공산품부문 無稅化 · 관세 조화 품목					
분 야	美·日·EC·加 합의품목수	양허계획서상 참 여 품 목			참여불가 품목
		참여	조건부	합계	
(관세無稅化)					
철 강	34	34	--	34	컨테이너, 불도저(2) 비타민, 항생물질 등 (4) 엑스선기기 등(6)
건설 장비	10	6	2	8	
의 약 품	10	4	2	6	
의료 기기	13	3	4	7	
가 구	2	2	--	2	수확기, 탈곡기(1) 맥 주(1) 증류수(1)
농 업 장 비	4	1	2	3	
맥 주	1	--	--	--	
증 류 수	1	--	--	--	
계	75	50	10	60	15
화 학 제 품 관 세 조 화	196	192	--	192	페니실린 등(4)

(註) 조건부는 이행기간이 장기(7~8년)간 필요한 경우.

8. UR협정 후 서비스 분야의 영향은?

(출처 : 홍성천, UR타결과 파장, 이코노미스트, 1994.1.5)

금융·서비스·지적재산권 분야의 UR협상이 타결되었지만 개방이 가져오는 각 분야별 국내산업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분야의 개방이 가져올 파문의 심각성은 쌀시장보다 훨씬 크지만 쌀시장 개방 문제에 가려 여지껏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중 하나인 금융부문에서 정부는 예금 및 관련업무, 대출 및 관련업무, 금융리스, 증권인수, 금융중개, 생명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등 15개 업종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5년부터 외국은행의 사무소 신설 인가시에 하던 경제적 필요성 심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우리 국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새상품을 자유롭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확정한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 계획(블루 프린트) 중 일부를 이번 UR금융부문 개방계획서로 제출했다. 이 개방계획서는 제 1단계(93년중)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주식투자한도를 폐지하고, 제 2단계(94~95년)에서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 확대, 국공채 발행시 외국인의 인수 허용, 제 3단계(96~97년)에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은행에 대한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가. 8개 분야 78개 業種 95년 개방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산업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율화와 구조개편,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시급히 시장을 정비하지 않으면 UR개방 태풍이 한바탕 금융권을 강타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계획은 금융산업개방 보다 자본시장 투자개방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 확대 및 채권 시장개방 등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방향대로 시장이 개방되면 해외자금유입이 가속화되어 통화관리 및 환율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다. 일례로

94년에 예상되는 자본유입액은 120억달러인데 이는 총통화 증가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인 것이다.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민간부문의 해외투자 및 부동산 구입을 점차 자유화시키면서 민간의 외화보유한도를 확대하는 등 외화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금융산업 개방안은 외국금융기관들의 투신·투자자문·은행에 대한 지분참여만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95년 이후 투신사·투자자문사 등의 진출이 본격화 되면 외국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국내 투신업체 및 투자자문업이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96년 이후 외국금융기관들이 은행업에 지분참여를 통해 진출하면 국내 은행간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회원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11개 분야 중 교육보건·사회문화·오락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사업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 등 8개 분야 78개 업종의 문이 95년부터 열리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직업·컴퓨터·임대서비스 등 31개 업종의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시청각서비스 등 9개 업종의 통신서비스 ▲일반건축·일반토목·설치 및 조립 등 5개 업종의 건설 ▲도매·소매·중개·프랜차이즈 서비스 등 4개 업종의 유통 ▲하수서비스·폐기물 처리·기타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환경 ▲호텔·여행알선 서비스 등 3개 업종의 관광 ▲해운·항공·도로운송 등 8개 업종의 운송 등으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그동안 제조업 우선 정책으로 인해 낙후되어 있던 국내 서비스 기업들의 시장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컴퓨터에서 하수도,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잡다한 모든 분야에서 국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선진기법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 5년마다 協商 갖기로

서비스분야는 5년마다 협상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화 약속 대상 업종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시장개방이 큰 영향이 없다고 해도 외국기업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며 경쟁력이 없는 영세업체들은 도산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은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100% 허용될 예정이어서 새롭게 생기는 시장의 일부를 외국업체들이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100% 허용되면 일반토목부문 등 경쟁력 있는 분야가 받는 영향은 적겠지만 고도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외국업체들이 판을 칠 전망이다. 해외건설 시장진출이 보다 자유로워져 日本·美國 등 선진국 시장으로 우리 업체들이 진출하는 게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은 현재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낙후된 상태다. 때문에 96년부터 완전 개방되면 국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생계형 영세매점들은 파산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운송은 기존의 자유화 계획을 약속한 것이지만 자유화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과 선진경영기법을 갖춘 외국업체들이 점차적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선진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기법 자본 등이 국내로 이전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서비스 분야의 다양화 및 효율화가 가속되는 긍정적 영향도 있을 전망이다.

UR 知的財産權 협정문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각종 조약에서 보호되던 도서문에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 음반 방송사업자들의 권리에 관한 저작권접권, 상표 와인 등의 주류에 관한 지리적 표시, 의장, 기술적 발명에 관한 특허 이외에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칩 같은 직접회로의 배치설치권 및 영업비밀 등의 새로운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타인이 권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해 제조한 물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수출 입단계에 있게 되면 단속 압수 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지적재산권 제도가 그간 美國과의 협상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 상당히 도달해 있고 장기적으로도 우리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하지만 모든 UR협상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의 영향력이 사실 엄청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적재산권 문제가 걸리지 않는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GATT의 무차별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이 확산될 경우 첨단산업 분야, 출판 및 음반분야 등에서 국내산업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일례로 첨단기술 이용권인 로열티가

급격히 오를 것이고 특허권, 상표권, 새로운 경영기법같은 선진국의 지적재산권이 국내에서 철저히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9. UR협정 후 농산물 분야에 대한 대응책은?

(출처 : 홍성천, UR타결과 파장, 이코노미스트, 1994.1.5)

「쌀이 외국에 의해 초토화되지 않으려면 길은 단 하나이다. 경쟁력을 키우는 길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외국과의 협상에 의해 쌀 수입이 일정기간 동결되거나 3~5배의 관세 상당치가 붙어 일정 기간 3~5%의 최소시장접근이 허용된다고 해도 협상은 매년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 길밖에 없다면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의 쌀을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만드는 것만이 우리 쌀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자명해진다」

쌀을 국제시장에서 교역해본 경험이 있는, 국내에선 몇 안되는 쌀 무역상 중 한 사람인 H씨의 이러한 얘기는 그러나 사실상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92년부터 시작한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 계획등 이른바 新농정을 주창한지 오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잘했는니, 못했는니 하면서 협상의 결과에만 온신경을 모으고 있다면서 이제는 차근차근 「기본」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게 H씨의 주장이고 그 기본은 쌀의 생산비 인하와 품질 개선 등 쌀의 상품경쟁력에 있다는 것이다.

가. 총생산량의 4%만 輸出入

문을 열면 쌀농사는 망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아무리 10년간 쌀 수입을 국내 생산량의 1~4%정도만 수입을 허용하고 관세상당치를 매겨도 이대로 가면 망하는 시기는 이연될 뿐 망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외국 쌀의 값이 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밥을 하면 윤기가 흐르고 차진 이른바 자포니카 타입의 쌀인 美國의 칼로스쌀(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로즈라는 품종의 쌀 브랜드)은 가격이 t당 350달러선이다. 우리의 쌀 가격이 t당 1,600달러임에 비하면 1/4~1/5 수준이다. 최근 작황이 좋지 않아 日本이 쌀을

긴급 수입하는 탓에 쌀 값이 올랐는데 그래봐야 t당 500달러이다. 이 가격은 또 운임이 포함된 가격(C&F)기준이므로 美國내에서의 쌀 값과 국내 쌀 값만을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泰國이나 베트남 등에서 생산되는, 밥을 해도 차지지 않고 윤기가 없는 이른바 인디카 타입의 쌀은 물론 칼로스쌀보다 더 싸다. 다만 우리가 즐겨 찾는 쌀과는 질이 달라 수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농업관계자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 지금은 수입이 안되지만 90년 이전 제과업체나 조미료업체들이 원재료로 쓰기 위해 88년 1,100t, 89년 1,500t의 인디카 타입의 쌀을 수입하기도 했던 기업의 관계자들은 「품질도 좋은 데다 가격도 훨씬 싸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입했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볶음밥에 적합하여 개방시 경쟁대상이 된다」 고 이구동성이다.

입맛은 변하는 데다 제때 쌀 공급이 안되어 굶어 죽을 상황에서야 인디카 타입과 자포이카타입을 구별할 처지가 못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맛론, 그에 따른 국내 쌀의 생존가능성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농업관계자들의 얘기다.

나. 소규모 專門 貿易商 많아

가격과 입맛보다 더 중요한 것은 쌀의 무역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92~93년도 세계의 쌀 생산량은 精穀 기준으로 3억 5,030만t이다. 이 중 대부분은 자국민들이 소비하고 단지 4% 정도인 1,432만t이 수출입될 뿐이다. 이나마도 40% 정도는 美公法(PL)480호에 의한 원조등 정부간 거래이다. 나머지 60% 정도가 민간의 거래대상이 되는 등 무역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곡물에 비해 미미하므로 세계의 곡물 무역을 주름잡고 있는 곡물메이저들이 크게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다. 6대 메이저 중 컨티넨탈과 카길, 드레퓌스 등 3개사 정도가 쌀 무역을 하고 있지만 각각 50만t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세계 무역상들은 프랑스와 英國 기업 등 소규모의 쌀 전문 무역상들이다. 쌀의 주요 수출국들은 泰國과 베트남·파키스탄 등 프랑스와 英國의 예전 식민지적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곡물무역도 그렇

듯 무역상이 국왕이나 해당국의 실력자와 친분이 깊다면 아무리 大메이저라고 해도 소규모 전문 무역상을 이기지 못한다.

쌀 무역이 대규모 메이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쌀의 주요 생산국이나 수출국은 대개 政情이 불안한 開途國들이다. 93년 기준으로 5대 생산국을 보면 中國과 印度,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이고 5대 수출국을 보면 泰國과 美國, 베트남, 파키스탄과 中國 등이다. 美國을 제외하면 모두 수리시설이 불완전하고 따라서 기후조건에 작황이 크게 의존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공급량을 예측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만큼 쌀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투기성이 강한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무역량이 적고 상품 자체가 벌크(bulk)성이기 때문에 운임이 비싸게 먹히는 등 마진이 상대적으로 극히 적다. 高위험-低마진인 만큼 대규모 메이저들이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 연간 400만~500만t(정곡기준)을 생산·소비하는 우리나라 900만~1,000만t을 생산·소비하는 日本이 쌀 시장을 점차 열어간다면 그만큼 무역량은 늘수밖에 없고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쌀의 이윤이 커진다면 쌀 생산도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최대 쌀 생산국인 中國이 1%만 생산량을 늘려도 쌀의 생산량은 정곡기준으로 130만t이 늘어난다. 우리나라와 日本 국민이 자포니카 타입만 찾는다고 해도 中國의 연간 자포니카 타입 쌀 생산량이 정곡기준으로 1,000만t인 만큼 1%만 늘려도 10만t의 쌀이 더 생산된다.

자포니카 타입의 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 EC와 美國은 각각 연간 120만t과 100만t을 생산하여 이중 60~70%는 자국내에서 쓰고 나머지 50만t과 40만t을 각각 수출한다. 1%늘어봐야 양국 합쳐 1만t 정도만 더 생산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칼로스 쌀을 생산하는 美國이 그 產地인 캘리포니아의 경작면적을 아무리 늘려도 55만t 이상 수출하기 어렵고 따라서 국내에 많이 들어와봐야 20만t 정도밖에 못들어오며 2000년대 쌀이 소비량의 5%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도 한다.

다. 日 시장 日 종합상사가 장악

그러나 쌀 무역상 H씨는 이러한 얘기는 경제논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한다. 「예를 들어 보자. 만약 쌀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마진율이 제조업의 평균 이익률보다 앞선다고 하자. 현재는 자급자족하기도 바쁜 中國이 당장 수출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자포니카 타입, 인다카 타입 구분하지만 中國은 현단계에서만도 자포니카 타입의 쌀 생산량이 1,000만t이다. 양 종자간에 맛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남는다면 인디카 타입의 쌀을 자포니카 타입으로 만들어 내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펼 것이다. 이점은 美國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쌀 개방은 경쟁력으로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쌀 값을 낮추어야 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쌀 농사는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한 번 망하면 영원히 끝이다. 복구하는 데 엄청나게 긴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쟁력은 생산뿐 아니라 유통에서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쌀의 유통도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내 유통뿐 아니라 최소한 국내에 들어오는 쌀은 국내인이 장악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H씨는 주장한다.

日本은 자국에 들어오는 곡물은 日本 종합상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아무리 식량 메이저라고 해도 그들이 손댈 수 없도록 정보와 노하우면에서 日本 종합상사들이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밀의 경우 95% 이상을 日本 종합상사들이 취급한다. 日本 정부가 식량을 조달할 때 자국 상사 우대방침을 펴는 데다 韓國등 아시아국에 수출할 때 메이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배려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日本 종합상사 밀을 日本에 100원에 들여온다면 韓國에는 95원에 팔도록 권장한다는 것이다. 그 손실은 다른 방법으로 日本정부가 보장해 준다.

향후 10년간 1~4% 쌀을 개방할 때 수입처는 韓國정부가 될 수도 있고 농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도 지금까지 대로라면 외국의 무역상들에게 공개입찰을 부칠 것이다. 국내에 쌀 전문 무역상이나 쌀 무역을 다뤄본 종합상사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작 필요할 때 적절한 값에

필요한 양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통제권과 지배력이 상실된다는 얘기이다. 우리 무역상들이 외국의 농지에 투자하거나 세계의 작황을 예측하고 입도선매하여 흉작기에도 적절한 값으로 필요한 양을 수입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春窮期』는 재연될 수 있다. 물론 만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식량문제는 만의 하나까지도 대비하여 하는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쌀 수입을 다뤄본 기업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10. UR협정 후 공산품 분야에 대한 대응책은?

(출처 : 홍성천, UR타결과 파장, 이코노미스트, 1994.1.5)

○ UR 협상결과는 우리경제의 개방화를 가속화 시키고 산업·무역에 영향을 주는 우리의 모든 제도. 법령. 관행등을 국제기준에 상응한 수준으로 높이도록 요구할 것이므로, 이를 국제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 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함.

○ UR 타결 이후 세계 각국의 국제화·개방화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다 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의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므로, 산업정책의 초점은 각종 산업요소가격의 하향안정과 산업경제력 및 기업체질의 강화에 맞춰져야 함.

○ 한편 UR 타결로 인해 현재까지 정부가 운용해 왔던 제반 산업지원 정책 수단 선택의 폭에 새로운 제약이 부과되므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부의 정책비전 제시. 정보제공. 조정능력을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산업정책 수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11. UR에 대한 향후 일정은?

(출처 : UR협상결과 평가, 경제동향, 1993.12)

- '93.12.15 貿易協商委員會에서 협상결과 채택
- '94.1~3 協商結果의 법제화

○ 각국이 '93.12.15까지 종결하여 통보한 공산품, 농산물,

- 서비스 각 分野別 市場接近 協商結果를 공식 문서화하여
最終的인 國別 履行計劃書를 '94.2.15까지 제출
- 3.31까지 國別履行計劃書에 대한 GATT 事務局및 多者間
確認節次를 종료
 - '94.4.12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最終議定書를 正式 채택하고 同
議定書에 서명
 - '94.4월이후 각국의 協定文 수락을 위한 국내 비준동의 절차 진행
- < 國內節次 >
- 關聯部處協議
 - 關聯法令 整備(국내입법 및 관련법령의 필요한 개정)
 - 法制處 審査
 - 國務會議 審議 · 大統領 裁可
 - 國會受諾 同意
 - 政府代表의 協定文 署名
 - '95.1.1日以後 발효

12. UR의 정치적 의미는?

(출처 : 홍성천, UR타결과 파장, 이코노미스트, 1994.1.5)

최근 수십일간 우리 관심은 오로지 UR(우루과이 라운드)였다. 우리뿐만이 아니다. 세계의 눈길이 온통 제네바회의에 쏠렸다. UR협상 「12.15시한」의 결말과 귀추가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세계패권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UR협상이 풍기는 느낌은 경제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시한내 타결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美國의 모습, 특히 쌀시장 개방을 관철하려는 美國의 행위에서 우리는 19세기식 強權政治(Power Politics)와 帝國主義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세계적인 시장개방은 시대의 추세다. 세계를 만들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좀처럼 막아내기 어렵다.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지 않으면 국제고아가 될 판이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無資源·多人口 국가인 우리가 국제

무역에 의존치 않을 수도 없다. 그런 우리의 경제구조로는 개방이 오히려 필요할지 모른다. 개별품목을 초월하여 국가경제 전반적으로 손익을 따지면 개방이 훨씬 유익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합의도출방식이다. 약소국의 개별의사와 특수사정이 전혀 경청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향으로 결정났다.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협상의 여지는 있겠지만 강대국에 대한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제국주의시대의 강권정치방식과 다름 없었다.

UR타결의 주연은 美國이었다. 美國은 쌀의 大國이자 세계 패권국가(Hegemony State)다. 지금 美國 쌀의 국제시장 점유율은 19.6%다. 泰國의 34.3%에 다음가는 세계 2위다. 따라서 국제 쌀시장은 泰國과 美國의 독과점에 있다. 특히 美國쌀은 패권국가의 국제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더욱 무서운 존재다. 美國은 2차대전후 냉전시대의 兩極體制에서 蘇聯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여 지배해 왔다. 蘇聯이 붕괴하자 美國은 세계 單極體制의 지배자가 됐다. 천하를 통일하여 국제권력을 독점한 패자가 된 것이다. 패권국가는 세계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것을 못하면 패권이 유지되지 않는다. 국내 정치에서 안보와 치안을 확보치 못하는 집권자가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 經濟的 復元에 심혈 기울여

공산권의 붕괴로 단일화된 세계에서 美國은 패권국가가 되어 있지만 그 패권이 확고한 것은 아니다.

양극체제에서 美國이 공산권에 맞서 자본주의 세계를 지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軍事力과 세계의 富의 절반을 차지했던 經濟力, 그리고 국제적인 보편성을 갖는 自由主義 이데올로기였다.

이 세개의 무기로 美國은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었으나 최근 사정은 크게 달라져 있다. 蘇聯이라는 군사대국이 사라짐으로써 군사력이 차지하는 가치 비중이 크게 떨어졌다. 군사력은 항복한 적이나 기존의 우방을 상대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이 더 비중

있는 힘이 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력에서 美國은 日本·獨逸·EC로부터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다. 美國의 경제력으로는 패권국가로서의 힘을 발휘하여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지금 클린턴행정부의 世界政策은 군사력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출발하고 있다. 즉, 경제력을 복원하여 군사력의 비효용화를 보완해서 세계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美國이 NAFTA(北美자유무역협정)를 서둘러 역내 공동시장을 강화하는 것도 그런 정책의 출발점이다. 즉 北美를 장악하여 힘을 강화한 다음, 그 힘을 배경으로 아시아·태평양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묶어 이 지역을 공동시장화하여 장악하려는 것이 클린턴의 外交目標다.

경제적으로 볼 때 美國엔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더 소중하다. 유럽은 아시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고 美國에 대드는 편이다. 서유럽은 과거 두 차례의 세계전쟁에서 美國 때문에 살아남았고 전후에는 美國의 경제원조로 국력을 회복했다. 그런 유럽이 지금은 美國에 도전하는 입장이다. 서유럽의 도전을 극복하는 것도 美國으로서는 절실한 과제다.

나. 美 經濟管理체제 강화 布石

美國이 UR의 타결을 강력히 추진하는데는 유럽의 코를 꺾고 경제력을 회복하여 세계패권국가로서의 위엄과 힘을 다시 갖춰 단극체제하에서의 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 : 美國에 의한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美國이 그동안 서방세계를 영도해온 관리체제는 크게 두가지다. 군사적 관리체제와 경제적 관리체제가 그것이다. 군사적으로는 핵무기와 최첨단 재래식 무기 및 장비, 세계 각처에 깔아 놓은 군사기지와 해외주둔군, 자본주의국가들과 맺은 집단안보조약과 쌍무방위체제로 우방들을 통솔했다. 경제적으로는 통화안정을 위한 IMF(국제통화기금)와 국제금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일명 세계은행), 그리고 국가간의 상품흐름을 자유화하기 위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등 세계의 기구를 만들어 자본주의 세계

를 관리해 왔다.

냉전종결로 군사관리체제의 수명은 거의 다한 느낌이다. 경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경제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으나, 1970년대를 계기로 美國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자 IMF와 IBRD, GATT의 힘도 크게 약화됐다. 매년 몇차례 국제회의를 열고 있지만 50~60년대의 위력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

이번 UR타결을 위한 GATT의 제네바회의는 그런 경제관리 체제를 다시 강화하는 좋은 계기라고 美國은 생각했다. 실제로 그런 美國의 노력은 성공했다. 美國의 무기는 自由主義(Liberalism)라는 이데올로기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핵심적본질의 하나다. 모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생명이다. 이것은 팩스-브리타니카(Pax-Bntanica) 이래의 국제경제원리다.

이번 UR회의에서도 美國은 국제무역의 자유화라는 이론적 무기를 낼 수 있었다. 「자유」·「무차별」·「다각적」이 GATT나 IMF·IBRD의 기본이념이다.

문제는 강대국들이 그런 기본적인 自由經濟 정신과는 배채된채 경제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의 EC나 북미의 NAFTA, 동남아의ASEAM이 모두 가맹국들의 이익을 위해 비가맹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부자유」하고 「차별적」·「배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다. 쌀 武器, 資源帝國主義 행사

쌀의 대국인 美國이 미국시장개방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資源帝國主義다. 1970년대에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화하여 공업사회를 위협한 적이 있다. 산유량과 석유값·판매선을 중동산유국들의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마음대로 결정하여 몇차례 석유파동이 일곤 했었다. 그때 美國은 이같은 자원 무기화를 자원민족주의라고 규탄했다.

이젠 美國이 바로 쌀의 무기화를 통해 자원민족주의보다 더 이기적·공격적인 자원제국주의를 행사하고 있다. 쌀시장 개방 강요는 곧 食糧帝國主義다. 美國으로서는 논리상의 흠결이 아닐 수 없다. 쌀은 군사력의 쓸모가 약화되고, 경제력의 높아진 가치에 비해 美國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지금, 국제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쓸수밖에 없는 무기가 됐다. UR도 이젠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 풀수는 없다. 국익과 권력이 판치는 국제권력정치의 논리로 UR를 바라보고 풀어가야만 한다.

13. UR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출처 : 새 무역질서 대응전략 , 이코노미스트, 1994.4.20)

가. 새무역질서 대응전략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거센 반발을 보이는 것은 농민들이다. 쌀시장 개방으로 농사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었으니 당연하다. 더욱이 쌀은 우리의 主食이다. 시장개방으로 외국의 값싸고 맛있는 쌀이 밀려들어와 국내의 벼농사 기반을 무너뜨리고 主食을 외국으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게 된다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쌀만이 아니다. 모든 산업이 똑같은 처지다. 오히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숫자로만 보면 농업은 GNP의 7%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그 중 쌀의 비중은 전체 농업의 절반이 채 안된다. 이에 비해 제조업은 34%, 서비스부문이 40.5%이고 정부 서비스부문이 5.1%다.

이 중 제조업은 그동안의 시장개방으로 개방화율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서비스부문은 거의 개방이 안된 상태에서 이번 우루과이 라운드의 파도를 맞게 됐다.

제조업도 개방이 됐다고는 하지만 수출금융 등의 조세금융상의 혜택을 받거나 수입다변화품목등의 이름으로 직접보호를 받고 있는 업종이나 품목이 적지 않다. 이들도 조만간 보호막을 모두 벗어 던져야 한다.

한마디로 국내 산업 전체가 전면개방되고 弱肉強食의 원리가 지배하는 살벌한 국제경제전쟁의 와중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쌀 개방만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 전체가 승패·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어느 특정부문에 치우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하는 정부나 국민의 자세에 감정이 개입되어 자칫 합리적 판단이나 국제감각을 잃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다.

국내경제 전체를 보아야 하고 21세기에 대비하는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응전략으로는 누구나 지적하는 것이지만 경쟁력의 강화 이외에 길이 없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남보다 앞선 기술과 품질관리, 디자인, 시장전략으로 더 좋고 편리한 물건 혹은 양질의 서비스를 국제무대에 값싸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에 차이가 없다.

또하나 지적할 것은 시장개방으로 국내시장에서도 외국제품,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므로 모든 부문에서 세계 제일이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게 하자면 각 산업이 자기 분야에서 살을 깎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 묘안이 없다. 과거처럼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세계경제 질서가 국제협약 혹은 국제기구에 의해 좌우되는 마당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쌀시장 개방과정에서 우리는 정부능력의 한계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따라서 정부도 공연히 민간부문에 개입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개입하려 들면 자칫 뛰는 사람 뒷다리가 거는 결과가 되기 십상이다.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경쟁시대가 개별 부문뿐 아니라 총체적 경쟁의 시대가 된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맞추어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나. UR타결의 파장과 우리의 대응

(출처 : UR타결의 파장과 우리의 대응, 시사, 1994.1)

UR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번 UR타결은 우리에게 失보다는 得이 더 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교역자유화의 확대로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출을 확대할 여지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고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미 예견된대로 UR의 발효는 바로 ‘無國境 無限競爭’이라는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오직 强者만이 살아남는 냉엄한 국제환경이 현실로 닥치게 된 셈이다. 여기서 强者란 ‘競爭力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여러분야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가 전면개방이라는 UR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남지 않은 개방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 충격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UR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쌀을 비롯한 농업분야의 경우 협상팀이 애써 이끌어낸 10년간의 개방유예기간을 국내농업의 구조 전환기로 삼아 경쟁기반을 확충하는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 및 제조업분야도 마찬가지다. 업종과 시안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동안 누려온 보호막은 없어지게 돼 있다. 오직 경쟁력만이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 기업을 포함한 각경제주체들이 하루속히 경쟁력강화라는 자국노력에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 한국 경제 갈길이 멀다

(출처 : 한국 경제 갈길이 멀다, 이코노미스트, 1994.1.20)

국제화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그 뜻이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래서 짧게 표현하기가 힘들다. 우선 국제화란 단어에는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정치·경제·문화등에 있어 자기 나라의 수준보다 더 높은 국제 수준에 근접해 가겠다는 뜻도 들어 있다.

또한 국제화의 개념은 動的인 면을 지니고 있다. 국제적 수준을 指向해 나아가는 뜻이 있어서 국제화가 動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 수준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動的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수준이란 때로는 最上位선진국의 수준을 가리키지만 또 때로는 다수

선진국의 평균 수준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되는 국제 수준이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화는 매우 動的인 측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화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의미가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국제화는 자기의 나라의 전통 의식과 문화 및 가치관 등의 修正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제화는 어느 나라든 생각만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추진되지는 않는다.

(1) 政府 스스로 不信 부추겨

국제화를 통해 전세계인이 더불어 사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국제화는 國益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국익이란 국제정치·외교·경제 전반에 걸친 국가적 이익을 말하는데 국제화의 범위와 속도는 정부가 정하되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제화를 통해 국가적 이익은 추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自國民의 전통적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할 때 엄청난 내부저항이 발생하는 데 문제가 있다. 예컨대 몇년전 외국 담배가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대단한 진통을 겪었다. 외국산 담배가 수입되기 전에는 外産 담배의 거래나 흡연 사실이 발각되면 그에 대한 처벌은 가혹할 정도로 무거웠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외국 담배의 흡연의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외산 담배의 흡연이 국가 경제를 좀 먹는다는 기존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 전통적 가치관과 정서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국론이 시끄럽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소득 중대로 국민의 생활 수준이 올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될 때 개방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진다.

우리 물건을 외국에서 자유로이 팔 수 있는 것처럼 외국 물건도 우리 나라에 자유로이 들어 올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게 된다.

쌀시장 개방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웃나라 日本도 그동안 쌀시장 개방으로 큰 진통을 겪어 왔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해 할 경

제 大國인 일본이, 그리고 연간 수천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일본이 쌀시장을 개방하는 데 엄청난 세력의 내부저항을 받아 왔다.

그런데 주지할 만한 사실은 최근에 있는 여론 조사는 국민의 73%가 쌀시장 개방을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5년전 20% 정도 개방 찬성률과 비교할 때 일본 사람들의 의식도 지난 5년간 크게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과정을 지켜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첫째는 정부가 그동안 경쟁과 개방이라는 국제적 大勢에 둔감하여 막판에 와서 며칠 만에 쌀시장 개방 절대 不可에서 不可避로 선회하였고 이로써 국민에게 정부 不信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 나라 언론이 바른 여론을 선도하지 못하고 감정에 복받쳐 생성된 여론에 이끌려 오기만 했다는 점이다. 셋째로 우리나라 정치가들의 의식 수준이 국제 수준에서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이 국제 수준에서 크게 미달된다는 사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자국시장을 쉽게 개방하지 않는다. 피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항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 시장을 처음 열 때 우리국민들이 거세게 반대했고 또 쇠고기 시장을 처음 열 때도 그랬다.

(2) 開放과정 너무 非效率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主食인 쌀을 외국 농민에게 맡긴다는데 거국적으로 반대 안할 수 없다. 또 그래야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어느 정도 살아 있음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아무 반항도 없이 있다가 외국의 개방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기까지 할 것이다. 또 그같은 내부적 반대를 自國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쌀의 경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 개방은 어느 누구도 물리치기 힘든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쌀개방 절대 불가를 외치며 국력을 소모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결국 개방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필요하게 계층간의 갈등과 마찰을 심화시키

고 정부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귀중한 국가 지원을 허비하고 있다. 경제적 용어를 빌린다면 우리나라는 매우 비효율적인 개방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의 개방 과정이 지극히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정치의 낙후성, 둘째 정부관료의 무사안일, 세째 언론의 무책임, 넷째 국민의 국제화 의식 결여라고 본다.

국정 운영에 있어 사사건건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하여 육탄공격을 서슴치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쌀시장 문제를 일찍부터 거론함으로써 야당과 재야로부터 발목을 붙들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 관료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쌀시장 개방을 일찍부터 운을 뻔으로써 국민으로 부터의 반대와 데모로 몇 년간 시달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막판에 가서 개방 선언을 해야 반대시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음직도 하다.

우리 국민은 오래 전부터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시달려 왔기 때문에 피해 의식에 젖어 있으며 흑백 논리에 익숙해 있다. 그래서 국민 감정이 한 번 폭발하면 건잡을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기도 한다.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소신 있게 말하는 엘리트와 학자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게 무시 못할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몇 학자들이 개방의 필요성을 잘못 얘기했다가 과격한 시민들로부터 오물 세례를 받거나 테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우리들 중에 무모하지만 끝까지 버텨보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것은 국제화 의식이 그만큼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螳螂拒轍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육중한 수레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사마귀(버마재비)가 앞을 가로막고 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분수를 알고 자체적으로 국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당랑거철의愚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시장개방으로 인해 나라 안이 시끄러울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어느 정도 반항은 있으되 적당한 선에서 그쳐야 하며 차분하게 대책을 미리 마련해 가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당면하게 될 개방에 있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고위경제관료의 임명은 정치적 논공행상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문성 위주로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정치도 국제화가 되어야 한다. 현 정치권에 있는 人士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당장의 인기 획득에 급급하지 말고 보다 진솔되고 보다 공정한 정치 활동을 떠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도 패배와 피해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음으로써 설부른 反외국이나 反美운동을 펴기 보다는 이를 악물고 조용히 우리 국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온갖 슬기를 짜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쌀개방으로 침통한 정부, 주간매경, 1993. 2. 15
2. 김세성,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 경제뉴스, 1993. 12. 13
3. 박두식, 제네바쌀시장개방백기들기까지, 주간조선, 1993. 12. 16
4. 김수환 추기경 미사 통해 국민에 호소, 주간조선, 1993. 12. 23
5. UR,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가, 재정, 1994. 1
6. 한국 경제 갈길이 멀다, 이코노미스트, 1994. 1. 20
7. 홍성천, UR 타결과 파장, 이코노미스트, 1994. 1. 5
8. UR 협상결과 및 평가, 경제동향, 1993. 12
9. UR 협상 후 손익계산서, 주간조선, 1993. 12. 23
10. UR 타결의 파장과 우리의 대응, 시사, 1994. 1
11. UR 이후농림수산부 업무보고내역, 한국일보, 1994. 1. 18